

6.13 지방선거 결과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그러나 정부 · 여당은 채우지 못한다 변화를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3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로 가는가?

4~5면

신중국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음은?

6면

여성이 다수인
스페인 새 내각 출범
배경과 전망

7면

검찰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8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2면

오라클 파업 2면

서울성모병원, 연장수당 받기 투쟁 7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현대·기아차의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 노조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원조차 몇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노동자들이 싸워 온 덕분에 몇 년 전부터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를 신규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올 초부터 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요

구하며 농성과 집회 등을 해 왔다. 그리고 정몽구-정의선 일가 퇴진과 구속 처벌, 4대 갑질(불법파견, 원하청 불공정 거래, 노조 와해, 불법 경영세습)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를 걸고 최근 공동 투쟁을 시작했다.

여성 노동자 배제 말라

특히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옹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규채용된 1500여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곳으로 강제 전환 배치되기까지 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불법파견은 성별을 가로질러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의 문제다. 사측은 아비한 차별을 중단하고, 성별 관계 없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규직인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의 우파 집행부는 조

립 라인에 여성 화장실, 탈의장 등 “준비”가 안 됐으며,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이번 신규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마치 여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웬만한 기아차 노동자들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진정 걱정하는 것은 여성 편의시설이 아니다. 그것이라면 사측에게 즉각 시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집행부의 노림수는 다른 데 있다. 기아차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장 2~3부, 프라스틱, PDI 등의 부서에 집중 고용돼 있다.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그 공정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마땅한 구조다.

예컨대, 지금 전환배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프라스틱 작업장에 여성 노동자 70여 명이 집단으로 일한다. 이곳을 여성 공정으로 보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우파 집행부의 의도

그런데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생각

은 다른 것 같다. 집행부는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을 바라는 조립 라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이용해 우파적 주장을 펴고 있다. 도장, 프라스틱, PDI 등 부서가 상대적으로 일이 편해 조립 라인의 정규직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즉,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 신규채용하면, 신규채용자들을 조립 라인에 우선 배치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일부 고참 노동자들을 도장, 프라스틱, PDI 등의 부서로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기회를 가로막고, 그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더구나 조립 라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회피한 채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만 조장한다. 이는 모두에게 해로운 뿐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제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임금 보전,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선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이 임금이 크게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임금 보전 없이 잔업을 통제·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임금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20만 원이나 깎이게 된다.

식당 노동자들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

을 강요당하며 고되게 일했다. 2012년부터 기아차에도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됐지만, 식당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측이 이 부분의 임금은 보전해 주지 않아서, 결국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0~80시간씩 일하며 부족한 임금을 수당으로 벌충해 왔다.

그런데 사측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강도를 더 높이려 한다.

식당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임금 보전과 인원 충원을 통한 3교대제(현재 2교대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연대를 조직해 나가자.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안형우

한국오라클 IT 노동자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된 임금 인상, 장시간·무급 노동 해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성과급 체계 변경, 고용 불안 해소,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 16일부터 첫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지가 상당하다. 그간 쌓인 설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사측은 거의 한 달이 지난 6월 11일에서야 교섭 자리에 나와서는 ‘선복귀 후교섭’이 본사 입장이라는 말만 했다. 노동자들을 쥐어짤 때는 온갖 권한을 휘두르더니, 이제 와서 본사 핑계다. 껄껄하기 짝이 없다.

한국오라클 김형래 사장은 “내가 뭘 잘못했나” 했다. 노동자들이 30일 동안이나 파업하며 그동안 사측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을 지목했는데 말이다!

사측은 교섭 와중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파업에 참가 중인 팀장을 강등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일도 보냈다. 평소에도 하지 않던 근태 체크를 매일 하며 파업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오라클 사측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을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해 수사하고, 100시간의 살인적

노동시간과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업이 노동자들을 변화시키다

사측은 아직 완강하지만, 한 달째 지속되는 파업 때문에 커지는 손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고객사가 떨어져 나가고 제조·금융·통신·공공 영역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치명적 오류에 대처하지 못할까 봐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파업 대응책을 둘러싸고 임원들 사이에 언쟁이 오가고 사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측은 파업 참가 인원을 파악려고 팀장들에게 근태 체크를 지시했지만,

절반이나 되는 팀장들이 이 지시를 거부했다. 사측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침묵 행진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시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고 임금도 받지 못해 걱정도 생기지만, 노동자들은 서로 결의를 다지며 버티자는 분위기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했다. 결국 동료를 믿지 않으면 내가 흔들린다. 우리 팀은 전원 파업하고 있다. 지금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동지들이다.”

“파업을 시작할 때는 순진하고 나약했다. 이제 구호와 노래가, 회사 앞 집회가 너무 좋다. 10년 간의 회한과 좌절을 털어 버리는 느낌이다. 파업하면서 내 표정이 너무 좋아졌다더라.”

“나는 내가 노동자인 줄도 몰랐다. 파업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투쟁이 노동자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 미참가자들을 파업에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라클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파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후원 계좌: 100-032-519680, 신한은행, 한국오라클노동조합 김철수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했을 뿐 아니라, 기초단체 66곳 중 겨우 3곳만을 차지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아성이라던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전패했다.

또 다른 우파 정당인 바른미래당은

급전직하로 무너졌다.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 명도 당선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의 합계 득표는 920만여 표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정당 득표는 197만여 표다. 700만 표 이상이 빠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은 호전적인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야당들에 분노했다.

일찍이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과 뒤이은 대선에서도 드러난 우파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 6.13 선거는 그 정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민주당 승리의 역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파 야당들을 물리치려고 민주당에 투표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 14곳을 거머쥐었고, 정당 투표에서도 전국 평균 52퍼센트를 득표했다(1297만여 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 중 11곳에서 당선했다.

대중의 반우파 진보 염원이 민주당으로 표현되는 역설적인 순간이다.

과거에 민주당은 진보진영 속에 끼지도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민주당을 엄밀하게 구별해 각각 '진보'와 '개혁'으로 규정했다.(물론 이런 구별을 했다 해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명확한 정치적 독자성을 한결같이 실행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흔히 냉전 우파에 맞서는 진보·개혁 세력의 계급 연합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이 진보로 규정됐다. 자유주의가 진보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예 민주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다. 가령 국회 의석 분포를 따지면서 흔히 '진보 블록' 대 '보수 블록'으로 나누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진보 염원을 실현할 '현실적' 선택지처럼 보는 것을 반영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기반 문

제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부와 구분해야 하는, 자본가 계급의 자유주의 정부다.

정부·여당은 지난 1년 동안 노동계급에 이로운 개혁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했다가 그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황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유화 국면 형성은 노동계급의 반발을 잠시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혁명적 좌파는 이런 정부·여당의 계급적 본질을 들춰 내야 한다. 그리고 모순된 대중 의식의 발전 방향을 봐야 한다. 현재 한국의 운동 상황은 1968년 반란이 패배한 1980년대 서구처럼 노동계급 운동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다. 그 시기 유럽의 노동계 공식 정당들은 급속히 우경화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고양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파업은 아니어도 꾸준히 항의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노동 대중의 진보 염원과 기대가 깨질 때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물론 그 행동과 의식의 발전은 불균등하겠지만 말이다.

여성 운동의 경우도 비슷하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에 몰카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여성 시위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두 차례 있었다. 그 짧은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평범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오래지 않아 그들은 몰카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들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일부는 더 급진적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종의 기대감을 갖고 대중이 행동에 나설 때, 좌파는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혁명적 좌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정의당, 제3당으로 부상의 의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이 광역 정당비례투표에서 획득한 표는 275만여 표다. 10퍼센트 약간 넘는다.

특히 정의당이 227만여 표를 얻었다(9퍼센트가량).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제3당이 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 3.6퍼센트에서 대폭 상승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은 200여만 표보다 20만 표 이상 늘었다. 지방선거 투표자 수가 대선 때보다 500만 명이 준 것에 비추면, 정의당의 절대 득표 증가는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정당 왼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전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노동계급이 자유주의 자본가들의 정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당은 이 정치 전략을 이번 선거에서 의식적으로 부각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비이락' (5번 정의당을 찍으면 2번 자유한국당이 떨어진다)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우파 야당 자유한국당을 핵심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아마 향후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는 정의당에 늘 민감한 쟁점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의식과 계급투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이 선거를 중시하는 정당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노동당 파업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등 대중 투쟁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정의당은 이를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대중의 운동에 되돌려 줘야 할 책임이 있다.

녹색당도 전진했다. 특히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는 8만 표 넘게 얻었다.(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보다 1200표를 더 얻었다.)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당당하게 밝힌 후보가 '부통령 선거'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8만 표 넘게 득표한 것은 좋은 일이다. 페미니즘 도서가 쏟아지고 대규모 여성 시위가 벌어지는 등 페미니즘이 부흥하는 분위기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지속 되려면 생태계 파괴 반대를 계급투쟁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와 비판적 지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혁주의가 득세한다는 것은 노동자 운동이 동일하고 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 일반과 특히 혁명의 역사는 최상의 당, 즉 최고로 선진적인 계급의 최고로 계급의식적인 전위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가졌고 더 다채로우며 더 여러 형태이고 더 교묘하다."

투쟁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예정돼 있지 않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방법에 제약이 있지만 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상황에 대처하려면 비판적 지지라는 전술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비판적 지지는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참가자가 바리케이드의 이편이나 저편이냐를 최우선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뒤죽박죽일지라도 참여 주체가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이면 그 운동을 무조건 지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오직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입에 칼을 물고 웃으면서' 운동의 방향을 건설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왜 비판적 지지가 필요한가? 자본주의는 극소수가 대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만큼 현실은 매우 모순되고 불합리하다. 혁명적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지 원칙만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다. 특히, 노동계급의 의식은 균등하지 않다. 사람들이 정치적 각성을 하는 계기는 여러 경로다. 처음에는 부분적 쟁점으로 싸웠지만, 자본주의 위기 하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따라 체제에 대한 전면적 반대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대중의식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김영익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은 싱가포르로 쏠렸다.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인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다.”

분명 낮은 장면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70여 년 동안 대치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긴장이 한껏 높아져 서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올 1월에만 해도 트럼프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고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김정은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그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부시나 오바마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이런 극적인 상황 전개를 보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다행으로 여겼을 것이다. 회담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를 떠나, 북·미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지난해의 긴장 국면이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앞으로 북·미 대화가 당장의 긴장 완화를 넘어 핵 없는 한반도와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에 이를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까?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사진 출처 Kevin Lin/The Straits Times

정상회담 결과에 격노한 미국 주류와 한국 우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모든 사람들이 반긴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우익들은 일제히 회담 결과를 성토했다. 홍준표는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김정은에게 놀아난 대실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도 북·미 정상회담이 “손해 보는 거래”였고 “최악의 결과”를 냈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냉전 우익의 본성을 드러낸 모습에 다수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주된 이유가 됐다.

그런데 많은 미국 지배자들도 이번 정상회담을 비난한다. 그들의 감정에 대해 탐사보도 전문가 팀 서복은 <네이션>에 이렇게 전한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것, 트럼프가 김정은과 새로 친분 관계를 튼 것, 북한과의 합의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미국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격노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 줬다고 트럼프를 비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얘기가 많다.

대외 정책 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비둘기파(온건파)와 매파(강경파)로 구분하는 게 잘못된 이해가 새삼 확인된다. 호전적 제국주의자라는 점에서 민주당·공화당 정치인들이나 트럼프는 오십보백보다.

미국 지배자들은 정상회담에서 비

핵화의 구체적 목표(“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하 CVID)”)와 비핵화 시기, 검증 방식 등 구체적 이행계획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CVID는 애당초 북·미 대화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조지 부시 2세 정부가 고안한 개념인 CVID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들의 권리인 ‘평화적 핵 이용’ 즉, 민간용 핵발전과 그런 목적의 연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을 제대로 충족하려면 핵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 핵심 연구자들 전원을 북한 밖으로 강제 구인해야 할 수 있다. 북한이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할 법한 일이라며 강하게 거부해 온 까닭이다. 그래서 과거 6자회담의 합의문들에도 CVID는 온전히 명시된 적이 없다.

오십보백보

북한과 ‘터무니없는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넘어, 미국 주류 정치권 다수는 트럼프가 미국 대외정책의 기존 지향을 흔드는 것 자체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는 서방 동맹국들의 회의인 G7 정상회담을 망쳤고, 동맹국 캐나다의 총리 트뤼도를 매우 부정직하고 나약한 자라고 직접 비난했다. 그 직후 — 트럼프는 김정은과 악수했고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지배자 다수가 당혹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위협’론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정교한 패권 전략의 하위 전술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점은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6월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한 비공개 연설로 드러난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선 반길 만하다.”

그래서 미국 지배자 다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말한 트럼프 때문에 자칫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예민하게 반응한다.

부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문제 수석담당관 마이클 그린은 5월 <포린 어페어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시사적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 협상들 속에서 체스 게임 2개를 동시에 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 다른 플레이어인 중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체스를 둘 것이 확실하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북한과의 체스를 둘 때 중국·러시아 등과의 체스, 즉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훈수다.

그러나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협상 상대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실로 파격이었고, 그만큼 그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과 관행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 나름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앞날에는 대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다.

우선, 미국 주류 정치권 못지않게 트럼프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자다. 6월 11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바흐람 가세미)은 같은 “불량국가”인 북한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미국의 상습적인 약속 파기와 의무 불이행을 바짝 경계하고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는 트럼프가 “믿을 수 없고 돌출적인 협상 상대”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북·미 합의가 이란 핵 협정의 운명을 밝힐 수 있다는 경고였다.

미국의 상습적인 약속 파기는 북한이 지난 30년 가까이 미국의 민주·공화 정부들을 상대하며 솔하게 경험했다. 그래도 5월 24일 북한은 정상회담 취소라는 트럼프의 돌출적인 결정에 당황했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곤혹스런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정자” 구실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부들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나서야, 정상회담은 다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견

미국 주류 정치인들의 비난이 역겹기는 하지만,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양꼬 빠진 찜빡’에 비유되는 이유다.

정세현 전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전문가들은 정상 간 합의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은 무식한 사람이나 할 소리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계획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애썼다. 정상회담 전날인 11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CVID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CVID 중에서도 V, 즉 검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시간이 없어서 [CVID를]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그럼에도 일단 합의 가능한 (추상적인) 선에서 공



북·미 대화에 영향을 줄 미·중 경쟁 올해 3월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미 항공모함

동성명을 작성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한국의 친여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북·미 간에 공개하지 않은 추가 합의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단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디테일에 숨은 악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장에, 공동성명에 적시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폼페이오는 아예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문제들 때문에 향후 실무 협상과 이행·검증 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즉, 좁고 길며 끝이 불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 순서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과거 북·미 합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먼저 제시되고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후순위에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미의 적대적 관계가 풀리고 관계가 정상화돼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상징적 성격이 강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트럼프의 말대로, 같은 기간에 미국이 북한에게 반대급부로 해 준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순서”는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상회담 후 미국이 조·미(북·미)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 제

재를 해제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언제나 한발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4일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아직 공동성명 서명의 잉크가 다 마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대화를 하기로 한 이상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유엔 제재를 완화했다가 재개하는 것보다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게 훨씬 쉽다.”(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제임스 제프리)

1차 북핵 위기를 돌이켜 봄 직하다. 1992년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어그러지자 불과 1년 만인 1993년 훈련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져 이듬해 여름 심각한 위기로 치달았다.

테이블 바깥

김정은은 싱가포르로 가면서 자국 항공기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탔다. “에어 차이나(Air China)”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노렸겠지만,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그것을 보며 한반도 문제에서도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여야 함을 새삼 확인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 문서를 찢어 버리면서, 이것이 이란과의 핵 협정 바깥의 정세 변화 때문에 내린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도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 바깥의 변수들이 더 결정적일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경

쟁이 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바(중국 제압)는 미국의 다른 주류 지배자들과 같다. 다만 그 전술이 다를 뿐이다.

트럼프에게도 북한과의 협상은 핵무기 비확산뿐 아니라 더 넓은 전선에서 중국과 벌이는 경쟁과 분리되지 않는 문제다. 그리고 그 경쟁 상황이 북핵 협상 테이블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또는 중국과의 갈등이 악화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심각하게 대두한다면, 상황이 지난해의 “화염과 분노”보다 더 악화할 개연성은 살아 있다. 우리가 트럼프의 미소를 보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까닭이다.

과제

물론 한반도의 상황은 지난해 가을 무렵에 견줘 분명 바뀌었다. 그때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계산 착오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반도 평화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강했다.

그러나 올해 긴장이 완화하고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반도 평화운동 건설은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로 여겨질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운동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며 정부 당국 간 회담을 지지하고 그것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서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체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에 도전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조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김영익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륙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드러내면서,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낙후했고 부문별로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임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듯하다.

분명 최근의 대륙 제재 강화는 북한이 협상에 나선 배경의 하나였다. 올해 초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인민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을 참았으며, 제재 강화가 주는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해외 자금줄 차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유 수입, 자원 수출입,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히는 제재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을 압박했다.

그래서 북한의 무역수지 전망이 밝지 않았다. 지난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이르면 올해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대륙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면서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1]

북·미 대화는 분명 중국, 러시아 쪽의 제재를 이완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당장 제재 문제를 푸는 것 외에 김정은 정권은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같다. 재미교포 학자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조선로동당 관계자한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의존하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의 무게중심이 갈수록 중국 쪽으로 쏠리는 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2]

북한 지배 관료들은 낙후한 경제를 재건하기를 열망하며, 과도한 대중국 의존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왔다.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시장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모든 점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방문한 싱가포르는 북한에게 거의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것 같다.

정상회담 전날인 6월 11일 저녁 김정은은 싱가포르 곳곳을 둘러봤다. 다음날 <로동신문>은 이를 신속하게 1면에 보도하며 김정은의 말도 전했다. “오늘 참관을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됐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 한다.”

물론 북한의 전면적인 시장 개혁·개방은 쉽지 않은 길이다. 미국과의 관계부터 완전히 풀려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에야 비로소 개혁·개방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모델

그러나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이 과연 북한 노동계급에 바람직한 길인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시장 개방으로 세계적 물류 중심지이자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다. 서방과 중국 자본 모두에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강력한 노동 탄압 속에서 가능했다. 지금도 싱가포르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어렵다. 싱가포르는 또한 전체 인구 530만 명 중 130만 명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다. 이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이 극심해, 2013년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극도의 통제와 태형까지 포함된 엄한 형법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말이다.

싱가포르는 일당 국가를 유지해 왔다. 의회는 거수기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싱가포르 독재자 리관유(1923~2015)가 박정희를 존경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정치 권력을 세습하는 데도 성공했다. 지금 리관유의 아들이 총리로 장기 집권 중이다.

이런 싱가포르에 북한 지배자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북한이 미래에 어찌어찌 시장 개혁·개방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북한 노동계급에 전혀 진보가 아니다. 전면적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 자본주의로의 옆길은일 뿐일 것이다. 남한과 미국 등 세계의 우파는 환호하겠지만 말이다.

[1] 류중훈 외,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가나출판사, 2018, 217쪽.

[2] 박한식·강국진, 《선을 넘어 생각한다》, 부키, 2018, 146~147쪽.



세습 지배자들의 만남 6월 10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셴룽 총리

맑시즘2018

7월 19일(목) ~ 22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정선영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화가 연초 대비 17퍼센트 폭락했다.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퍼센트, 2016년 3.46퍼센트 감소했다가 올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다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터키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 금리를 17.75퍼센트로 급격히 인상했다. 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남아공 등지에서도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신흥국 경제의 위기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긴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13일 기준금리를 1.75~2.0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했다.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매달 국채 300억 유로를 매입해 오던 통화 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테이퍼링)하며 '양적완화'를 종료할 계획이다.

미국은 자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낙관을 바탕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준 의장 파월은 “오늘의 결정은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세는 강하고 노동 시장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는 목표치에 이르렀다”며 향후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준의 낙관과 달리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 물론 2018년 1분기 기업들의 주식 1주당 순이익은 26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감세 정책 덕분이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감축하며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

그러나 세금 감면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전체 기업 이익은 2017년 4분기 0.1퍼센트 감소한 데 이어 2018년 1분기에 0.6퍼센트 줄었다. 2008년 대불황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G7 국가들 경제의 평균 수익률도 위기 이전보다 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져서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활동참가율도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단지 신흥국 경제만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발표를 보면, 미국 비금융기업이 진 빚 중 37퍼센트가 투자 적격 등급(BBB)에 못 미친다. 금리 인상은 이런 기업들의 파산 위기를 키울 것이다.



브라질에서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자동차들. 통화 가치 폭락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한층 커질 것이다

일본도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는 보도가 많지만 실상은 그리 좋지 않다. 2018년 1~8월 평균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 대비 1085만 명(12.5퍼센트) 감소해 7614만 명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취업자 수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6500만 명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 통계상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지, 진정한 성장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실질임금 인상률도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적완화가 낳은 모순

유럽도 지난해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을 탈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을 강타한 바 있듯이 곳곳에 정치적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막대한 재정을 쓴

아붓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여전히 낮은 이윤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각국 경제는 경기부양책에 기댄 값싼 신용을 바탕으로 거품을 키워 왔다.

2008년 위기 이후 부채는 더욱 늘었다. IMF 발표를 보면, 2016년 세계의 부채는 164조 달러로, 세계 GDP의 225퍼센트를 차지해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그래서 지배자들 내에서는 양적완화나 경기부양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해 왔다. IMF나 세계은행 등도 “잠재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물론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불황 시기에 구조조정과 망하는 자본가들의 설비·시설 등을 살아남은 자본가들이 헐값에 인수하는 것을 통해 자본가들이 이윤율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방식

은 착취율 강화와 함께 자본주의가 공황에서 벗어나는 고전적 방법이다.

그러나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집적과 집중이 벌어지면서 이런 대규모 자본 파괴를 통한 경제 회복은 크게 제한돼 왔다. 거대한 기업이 망할 경우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의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기업들을 구제했다. 그 결과가 비효율적인 자본들이 좀비처럼 살아서 자본주의가 만성적이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통한 이윤율 회복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자본가들은 경쟁자 들이나 더 작은 자본가들의 파산에서 득을 볼 수 있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그룹 중 절반이 쓰러지자 다른 재벌이나 외국 자본이 헐값에 인수하며 득을 봤듯이 말이다. 1980~1990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이윤율을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불충분했다. 짧은 회복과 긴 불황 속에서 장기적 이윤율 저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지금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 경제가 성장세에 있을 때 막대하게 팽창해 있는 거품(값싼 신용을 바탕으로 생겼다)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부실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보는 듯하다.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른 나라가 떠안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신흥국들의 위기가 커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경제가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미

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여길 법하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통화 긴축 정책이 시작될 때 지배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1929년에 대공황도 실물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1929년 8월 9일 뉴욕 연준이 기준금리를 6퍼센트까지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세계경제는 심각한 파국을 맞았다. 2008년 경제 위기도 2004년 6월부터 2년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폭발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지배자들도 금리 인상이 급격한 충격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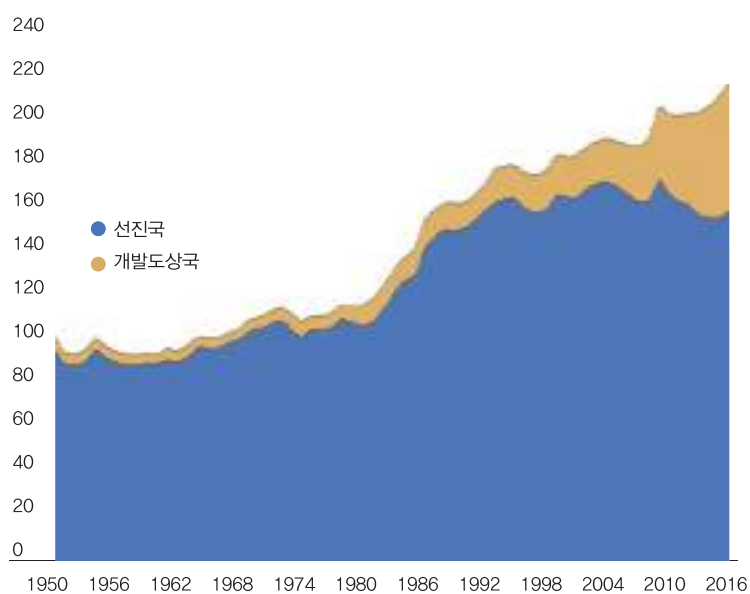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한층 더 강해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40퍼센트에 이른다. 마크리 정부는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면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인 공격을 벌여 왔는데,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이런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브라질에서도 우파 정부가 국영전력회사 민영화와 연금 개혁, 근로소득세를 인상,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포함한 친시장적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을 강화하려 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공격이 강화되는 시기에 이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1997~1998년 동아시아를 휩쓴 끔찍한 경제 공황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수하르토의 30년 독재를 끝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세계의 부채

(세계 GDP 대비 퍼센트, 출처: IMF)



여성이 다수인 스페인 새 내각 출범

부패와 차별에 항의한 대중 운동의 영향

차승일

스페인에서 우파 정당 국민당 소속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사퇴하고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가 들어섰다.

신임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장관직 17자리 중 11자리에 여성을 임명했다. 내각의 3분의 2를 여성이 차지한 것이다. 게다가 양성평등부 장관에는 동성애자 여성이 임명됐다.

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 천장'에 부딪혀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장관직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더구나 이런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의 효과라는 점이 뜻깊다.

스페인에서 사회당 정부가 출범한 데는 전임 우파 정부의 부패와 긴축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새 내각에 여성이 다수가 된 데는 올해 3월 8일 무려 530만 명이 참가한 세계 여성의 날 시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시위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결합됐다. 노동자 약 20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언론·운송·의료·교육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고, 남성 노동자들도 파업에 가세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해 이날 하루 300편가량의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

학생들도 시위에 대거 참가했고, 여러 여성단체·노동단체 등에 속한 많은 여성과 남성이 참가해 성차별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 향상을 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스페인 국민의



스페인에서 올해 '세계 여성의 날'에 전국 530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노동자 200만 명은 파업도 벌였다

82퍼센트가 이날 시위를 지지했다.

사회당 정부의 내각 구성은 대중 운동으로 표출된 여성들의 변화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당 정부가 노동계급 여성을 위한 실질적 개선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페인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4퍼센트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보다 평균 20퍼센트 적는데, 비정규직의 70퍼센트가 여성이다. 그래서 월급이 1002유로(약 127만 원) 이하인 저임

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절반이다. 스페인의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한국도 비슷하다).

현재 스페인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여성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려면 만만찮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당의 전력을 볼 때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100년

사회당은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1977년 첫 자유 총선이 실시된 이후

30여 년 동안 스페인 정치를 우파 국민당과 함께 양분해 왔다. 사회당은 1982~1996년, 2004~2011년 도합 23년 동안 집권했다.

집권 기간에 사회당은 스페인 자본주의의 시장 지향적 개혁을 추구했다. 그 핵심은 기업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민영화, 임금 인상 억제, 연금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었다. 현재 스페인의 젊은 노동자 다섯 중 넷은 평생 기간제 신세이고 그중 다수가 여성이다. 이 끔찍한 결과를 낳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바로 1982년 집권

한 펠리페 곤살레스 사회당 정부가 시작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도 사회당 정부의 긴축 정책은 계속됐다. 이에 항의해 2011년 스페인 청년들은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연금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며 광장(특히, 마드리드의 ‘태양의 문’ 광장) 점거 운동을 벌였다.

사회당은 이번에 부패 척결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지만, 일주일 만에 (남성) 장관 1명이 탈세 논란으로 사임한 데서 보듯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당이기도 하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지적해 왔듯이, 자본주의는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을 개별 가정에,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평등한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조건을 창출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가사와 양육의 대대적 사회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시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서는 자본주의 국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국가의 집행부에 속하게 되는 여성은 노동계급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체제와 국가의 우선순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사회당이 집권하면 어김 없이 지지자들을 배신해 온 까닭이다.

사회 고위층에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의 조건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 그러려면 여성 차별과 긴축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적 노동계급 운동이 성장할 때 노동계급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유혜린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원인이 돼 왔다. 이는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숙련도를 떨어뜨려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8년 전 노동조합 대의원을 시작하면서 나는 노동조합과 상의해 권리 찾기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병동 간호사가 연장수당을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 뒤로도 여러 병동에서 연장수당을 쓰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병동의 실질적 관리자인 수간호사의 판단에

좌우되기 일쑤였다. 어떤 수간호사는 수용했지만 일부 수간호사는 응급상황 등으로 생긴 초과 근무만 쓰도록 하는 등 통제했다. 연장수당을 쓰면 수간호사가 따로 불러서 면담하고, 개인 능력이 부족해 오래 일할 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부 수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며 1년 미만은 연장수당을 못 쓰게 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위축되거나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포기하기도 했지만, 연장수당을 쓰는 병동이 점차 늘어났다. 물론, 여전히 눈치 보느라 못 쓰는 병동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병동마다 연장수당 신청이 매우 불균등해졌다.

서울성모병원은 유니온샵이다. 그래서 입사하는 순간 조합원이 되지만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호사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간호사 대의원이 2명에서 1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근혜 퇴진 이후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병원 안으로도 스며든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등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새로 대의원이 된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장수당을 못 쓰던 병동에서도 연장수당 쓰기가 시작됐다. 또, 그동안 연장수당을 쓰던 병동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병원은 병동 간호사들에게 간호업무 외에도 컨퍼런스, 스터디, 위원회 회의, 의무기록 감사, 질관리 모니터링 등 수많은 업무를 시켰다. 간호업무만으로도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런 일들은 당연히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 하는데,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하고 해 온 것이다.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들과 같은 양의 간호업무를 하면서도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느라 남아서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했다. 교대 근무

를 하는 간호사들은 종종 쉬는 날(오프)에도 불려 나와 일해야 했고, 심지어 화식이 있으면 참석해야 했다.

의료기관 평가 준비 때는 청소, 환경관리, 평가교육 등 엄청난 양의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평가 준비 때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한다.)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논문도 쓰게 하고 경력이 오래된 일반 간호사들에게 공식 직무교육도 떠맡겨 왔다. 사업장 필수교육도 모두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공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당 한 톨도 없이 받아야 하는 교육도 많다.

이처럼 병원 측이 시키는 다양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아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장수당 쓰기가 더욱 확산됐다.

일부 수간호사들이 저항했지만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물러서지 않고 노동조합이 간호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 승인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매주 병동 순회를 통해 연장수당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올해 단체협상 요

구안에도 ‘근무와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당연히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장수당은 시급보다 비싸므로 이런 추가 비용 지불은 인력을 충원하도록 병원 측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올해 보건의료노조도 4OUT 운동을 핵심 요구로 채택했는데, 그중 첫째 OUT 대상이 공짜노동이다.

환자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자.

wspaper.org

★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정진희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에는 여성 대상 몰카범죄 피해를 무시해 온 경찰과 검찰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수십만 명의 청원과 6월 3만여 명의 시위로 폭발했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이런 일반 여성들의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등 많은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성차별적 편견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의심해 온 관행을 비판해 왔다. 무고 수사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주저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수사 지침 개정을 환영했다.

물론 반발도 있다. 유명 유튜브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검찰의 수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지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2017년 1월 〈미디어 오늘〉에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쓴 트로작가 이선옥 씨는 이번 수사 지침 개정을 반대하며 그 글을 〈리얼뉴스〉(5월 31일자)에 다시 게재했다. 한국여성성전화 상임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준숙 의원이 2016년 말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한 글이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 사건의 조사·수사·심리·재판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196호에서 필자는 이 법안의 취지를 지지했다.

이선옥 씨는 "무고는 심각한 범죄"이고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 장치를 두는 것은 자칫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2등 시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번 수사 지침 개정에 반대했다.

성폭력 무고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



성폭력 피해 수사와 무고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옳다

다. 성폭력 무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따라서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폭력 무고 피해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 이선옥 씨가 이 점을 지적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무고죄 수사에 유예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기본권과 헌법 원리상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이 경찰·검찰·사법부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호소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수사 지침 개정도 여성들의 불만이 커, 보수적 국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가 그 불만을 약간 인정한 것이다.

성폭력 무고의 통념과 진실

지난해 이선옥 씨는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은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고 주장했다. 근거가 빈약하다. 보수 언론이 이런 주장을 흔히 되풀이하지만, 한국에는 전체 무고와 분리된 성폭력 무고 통계 자체가 없다.

성폭력 무고 기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여성의 성폭력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범죄 신고율 폐지 뒤 검찰이 뚜렷한 기준 없이 무고죄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성폭력 무혐의 판정이 많다는 것도 성폭력 무고가 흔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건이 모두 무고 사건인 것은 아니다. 성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신고 여성의 진술을 제외하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기 쉽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이 곧 해당 신고의 허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이나 편견이 작용해 조기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연구 결과를 봐도, 성폭력 신고 여성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편견이나 성폭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시각 등의 이유 때문에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은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지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 허위 강간 신고가 많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여성 대상 범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법학자·변호사인 조디 래피얼은 〈강간은 강간이다〉(글항아리, 2016)에서 미국의 강간 허위 신고율을 2~8퍼센트로 추정했다. 2013년 영국 검찰청은 17개월간 접수된 5651건의 강간 신고 중 단지 35건(0.6퍼센트)만이 허위 신고였다고 보고했다.

이런 통계가 뜻하는 것은 성폭력 신고 여성의 압도 다수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 신고를 꺼린다. 여기에는 피해의 다수가 잘 아는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작용한다. 또한 길고 힘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작용한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이런 고통을 무릅쓰고 사법 당국에 피해를 호소한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자의적으로 여성들의 피해 호소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성들의 신고를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선옥 씨처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취지에 공감함에도 무고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무고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증거 확보에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성폭력 무고가 매우 과장돼 있긴 해도 실제로 존재하므로,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폭력 피해 수사와 무고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판명되는 사람 다수가 무고나 명예훼손을 피해자들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인데, 억울하게 무고죄 피의자로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수사에서는 피해호소인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고 성폭력 신고를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이 철저할수록 무고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줄어든 것이다.

무고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을 퍼뜨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관행과 이에 부응하거나 부추기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성폭력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죄로 취급하거나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성폭력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수사 지침 개정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취지를 지지해야 한다.

물론 이런 조치로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수사·처벌이 온전하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훨씬 많이 갖춘 해외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에 따른 사법 피해를 많이 겪는다. 따라서 대학로 3만 명 시위처럼, 여성차별에 맞서는 아래로부터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태도가 실질적으로 도전받기가 쉬워질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지역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간선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